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 2021년(상반기) -

## 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농업자원관리원, 향만관리사업소, 환경교육원)

---



경 상 남 도  
(감 사 위 원 회)

## <목 차>

1.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처리 부적정 .....	3
2. 하자검사 미이행 .....	8
3.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부적정 .....	11
4.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미제정 및 의무검사비 지원신청 누락 .....	16
5. 하자검사 미이행 및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	21
6.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25
7.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추진 부적정 .....	28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농업자원관리원

조 치 기 관 농업자원관리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2019. 6. 14.부터 2021. 6. 8. 감사일 현재까지 ○○○○  
○○○○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표 1]과 같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업무를 추진  
해 오고 있다.

#### [표 1] ○○○○ ○○○○ 추진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

< 생 략 >

### 2. 공유재산 취득·처분(교환)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  
· 양여·신탁 등을 하지 못하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의2 제1항에서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2

호, 및 영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 기준에 맞는 재산이라 함은 ①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②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③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토지는 교환을 제한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절차로 취득해야 한다.

이에,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보건시설·문화시설 등 및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과 그 밖에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은 1 ~ 110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은 31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토지보상법을 적용받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고 교환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 ○○○○ 조성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sup>1)</sup>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방식으로 사유지를 취득(매입)하여야 함에도, [표 2]와 같이 사유지 ○○○ ○○○○ ○○○ ○○○○번지 외 ○필지 23,528.4㎡와 도유지 ○○○ ○○○○ ○○○ ○○○○번지 외 ○필지 29,063.8㎡를 2019. 11. 26.부터 2020. 7. 9. 기간에 교환 처분하였다.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 ○○○○ 공모 사업 추진

## [표 2] ○○○○ ○○○○ 조성 토지 교환처리 현황

### < 생 략 >

### 3. 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결 및 공유재산 심의회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을 심의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대장가액 5천만 원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의 토지 중 그 면적이 30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게 취득·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 ○○○○ 조성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 받은 후 [표 3]과 같이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61퍼센트 증가되어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처분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2019. 12. 3.부터 2020. 7. 9.까지 교환 처분하여 부적절하게 공유재산 처분 업무를 처리하였다.

### [표 3] ○○○○ ○○○○ 조성 토지 교환 처분 현황

< 생 략 >

또한 ○○○○ ○○○○ ○○○○ ○○○○번지 등 5필지는 [표 4]와 같이 대장가액이 각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처분하여야 함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분하였다.

### [표 4]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없이 처분한 공유재산 현황

< 생 략 >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법령 미숙지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폭넓은 연찬과 규정을 숙지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농업자원관리원장은

-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을 위반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할 공익사업용 토지를 교환 방식으로 부적절

하게 처리토록 결정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실무책임자 ○○○○○○ 지방○○○○○ ○○○(현 ○○○○○○)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의회 의결 없이 공유재산 취득·처분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도록 결정한 실무책임자 ○○○○○○○○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고, (주의)

실무책임자와 감독책임자로서 공익사업용 토지를 교환 취득하고, 공유재산(변경)심의 및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분하는 등 공유재산 취득·처분 업무 전반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이면서 감독책임자인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오니, (훈계)

-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유재산 취득·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하자검사 미이행

소 관 기 관 농업자원관리원

조 치 기 관 농업자원관리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하자보수를 위해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 6. 8. 감사일 현재 기준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유효한 공사현황은 [표 1]과 같이 2017년 이전 10건, 2018년 8건, 2019년 2건, 2020년 2건 총 22건이다.

[표 1]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 현황

(2021. 6. 8. 기준)

연도별	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공사 건수	22건	10건	8건	2건	2건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라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는 하자보수 관리부 및 하자검사조서 작성하는 등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2017. 5. 1.부터 2021. 6. 8.까지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유효한 공사 22건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서 하자검사 실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표 2]와 같이 정기검사 18건, 최종검사는 17건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2019년도에는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최종검사 없이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를 요청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지난 2017. 5월 도 종합감사에서 하자검사 미이행으로 지적되어 재발 방지 ‘주의’ 촉구한 바 있음에도, 이번 감사 시까지 동일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표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유효한 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

(단위:건수)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실시	미실시	계	실시	미실시	계	실시	미실시	계	실시	미실시
계	61	26	35	30	18	12	19	-	19	12	8	4
정기검사	42	24	18	22	18	4	12	-	12	8	6	2
최종검사	19	2	17	8	-	8	7	-	7	4	2	2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공사별 하자검사 실시 세부현황 별첨(별표 1)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 미숙 및 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해 하자검사 실시를 소홀히 하였으나,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농업자원관리원장은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등을 위반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 실무담당자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오니,(주의)
- ② 앞으로 하사검사는 누락 없이 실시하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오니 하자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부적정

소 관 기 관 항만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항만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2017. 7. 1.부터 2021. 6. 18.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417건 11,220백만여 원을 징수하고,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업종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자에게 감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1]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 천 원)

구분	계		정기분		수시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17	11,220,036	309	7,333,153	108	3,886,883
2017.7~12월	87	3,599,840	84	3,476,935	3	122,905
2018년	124	4,182,414	64	849,783	60	3,332,631
2019년	78	782,112	57	638,856	21	143,256
2020년	128	2,655,670	104	2,367,579	24	288,091

출처) ○○○○○○○○ 제출 자료 재구성

## 2.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③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4호와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재난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소재한 특정 업종에 대한 점·사용료 감면 규정 시행<sup>2)</sup>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을 통보<sup>3)</sup> 하면서 대상 업종은 조선업, 조선기자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의 소분류번호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고 적용지역은 신청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거제시·통영시 등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회계법」 제21조에서 징수관은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납입 고지하여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8.12.31.공포, ’19.7.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19.6.18. 공포, ’19.7.1. 시행) 개정

3)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687(2019.7.16.) 산업·고용위기지역 등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세부 절차 안내

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 또는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을 하였을 때는 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산업위기지역 등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때에는 대상지역인 통영시에 사업장이 있고 조선업·조선기자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고, 세입의 감면결정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그 감면을 취소하고 정당한 점·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2019. 8. 5. 2019년도 정기분 공용수면 점·사용료를 감면 처리하면서 ○○○○○○○○4)가 감면 해당 업종인 조선업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도 통영 등의 대상지역이 아닌 ○○시와 ○○시에 소재하고 있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표 2]와 같이 2019년 정기분 점용료 3건 203,556천 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하였다.

**[표 2] 2019년 ○○○○○○○○○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처리 현황**

(단위 : m<sup>2</sup>, 천 원)

연번	기준 토지	점용 면적	점·사용료 감면액	감면 대상 점용기간	점용 내용	비 고
계		70,287	203,556			
1		65,199	165,774	2019.6.1. ~ 2020.5.31.	선가대, 안벽 등 직·간접 점용	2019. 8. 5. (감면결정일)
2		4,179	28,745			
3		909	9,037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4) ○○○○○○○○○ ○○○○ ○○의 사업장 소재지는 ○○○ ○○○ ○○○○ ○○○,(○○○)이며, 업태 및 업종은 건설업, 부동산업, 주택건축판매, 부동산관리업 등으로 조선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2020. 8. 7. 2020년 정기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 처리하면서 전년도 감면처리가 착오임을 인지하고 [표 3]과 같이 ○○○○○○○○의 3건 201,205천 원을 감면하지 않고 정상 징수했으나, 2019년도 착오 감면한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취소와 정당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표 3] ○○○○○○○○ 2020년 정기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현황**

(단위 : m<sup>2</sup>, 천 원)

연번	기준 토지	점용 면적	점·사용료 부과액	점용 기간	점용 내용	비 고
계		70,287	201,205			
1		65,199	167,377	2020.6.1.~ 2021.5.31.	선가대, 안벽 등 직·간접 점용	부과일자 2020. 8. 7.
2		4,179	29,366			
3		909	4,462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법령과 규정 미숙지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부적정한 감면과 착오감면 결정 취소 및 재징수를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폭넓은 업무연찬과 공유수면 관련 분야의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항만관리사업소장은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적정하게 감면처리 한 ○○○○○○○○ 실무책임자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훈계**)

「지방회계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2019년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착오를 인지하고도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하지 않은 ○○○○○○○○ 실무책임자 지방○○○○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오니, (주의)

-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제21조 등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감면한 ○○○○○○○○의 2019년 정기분 공유수면 점·사용료 3건 203,556천 원은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하도록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미제정 및 의무검사비 지원신청 누락

소 관 기 관 항만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항만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에서는 항만순찰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관공선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 1] 관공선 관리·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선박명칭	선박종류	톤수	건조일	건조비	비고
1		순찰선	22톤	2009.12.22	1,481,600	
2		순찰선	33톤	2017.09.22	2,339,661	
3		순찰선	22톤	2000.12.22	784,000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관공선의 재해 또는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표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 납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적 요	납부일	납부액	납부처	비고
1	2017년도 공유재산(관공선) 정기등록 공제회비 납부	2017-03-27	38,9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2018년도 공유재산(관공선) 정기등록 공제회비 납부	2018-03-26	68,41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2019년도 공유재산(관공선) 정기등록 공제회비 납부	2019-03-29	68,64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2020년도 공유재산(관공선) 정기등록 공제회비 납부	2020-03-31	71,74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2021년도 공유재산(관공선) 정기등록 공제회비 납부	2021-03-19	77,36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미제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이 2008년 6월 5일 폐지되어 관공선에 대한 관리운영 기준의 부재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자체 관공선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마련 권고」안을 통보(2013. 11.23)하여 자체적인 관공선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경상남도 ○○○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공선 관리기준을 제정하도록 경상남도 ○○○○○○○○에 통보(2013. 11. 16)하면서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제정 계획 및 추진일정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선박관리, 안전관리, 선박의 물품관리, 교육훈련, 보험가입, 건조 및 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공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2013년 12월 13일 경상남도 ○○○에 ‘관공선 (항만순찰선) 관리운영 기준 제정 계획’을 제출하면서 2014년 5월 중으로 경상남도 항만순찰선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2021년 6월 17일 감사일 현재 까지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관공선의 운항계획, 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의 기준도 없이 관공선을 운항하고 있다.

### 3. 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신청 누락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기준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및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지원규칙」 제3조에 따라 지방관공선의 의무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검사비에 대한 신청은 선박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법정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검사비 지원대상은 지방관공선 중 검사일 이전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에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한 선박으로 검사비는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전파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 등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상남도지부에서는 지방관공선 법정 의무검사 준수 등 선박 안전관리 이행 강화 및 실질적인 회원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문을 발송<sup>5)</sup>하여 검사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관공선 관리담당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검사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방관공선을 「선박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의무검사를 수행하고 검사비를 지급한 경우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지원규칙」 제5조의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 신청서, 선박검사증서, 검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선박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검사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5) 한국지방재정공제회경상남도지부-859(2017.5.29.), 한국지방재정공제회경상남도지부-73(2019.1.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경상남도지부-486(2020.4.7.)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 ○○○○○○○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총 22건 지방관공선 의무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기관에 검사비를 지급하였으나, 2017년 4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건, 총 22건, 6,252,500원의 의무검사비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중 16건, 총 4,349,000원은 의무검사비 지원신청 기한이 경과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표 3] 관공선 의무검사 내역

(단위 : 원)

연번	검사일자	검사종류	선박명	검사비용	검사기관	관련법	비고
합 계				6,252,500			
1	2017.11.13	무선국		253,000	부산전파관리소	전파법	기한경과 16건 (4,349천원)
2	2017.11.14	무선국		213,000	"	"	
3	2017.12.26	1종중간		480,00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4	2017.12.26	2종중간		145,000	"	"	
5	2018.09.17	무선국		403,000	부산전파관리소	전파법	
6	2018.11.13	무선국		213,000	"	"	
7	2018.11.13	무선국		233,000	"	"	
8	2018.12.07	2종중간		145,00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9	2018.12.07	1종중간		480,000	"	"	
10	2018.12.07	2종중간		145,000	"	"	
11	2019.09.17	무선국		403,000	부산전파관리소	전파법	
12	2019.11.13	무선국		233,000	"	"	
13	2019.11.13	무선국		233,000	"	"	
14	2019.12.16	정기검사		480,00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15	2019.12.16	2종중간		145,000	"	"	
16	2019.12.17	2종중간		145,000	"	"	
17	2020.09.17	무선국		403,000	부산전파관리소	전파법	신청가능 6건 (1,903천원)
18	2020.11.12	무선국		350,000	"	"	
19	2020.11.13	무선국		350,000	"	"	
20	2020.11.11	2종중간		145,00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21	2020.11.16	1종중간		280,000	"	"	
22	2020.11.18	정기검사		375,500	"	"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법령과 규정 미숙지로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미제정과 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신청 누락에 대하여 향후 폭넓은 업무연찬과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에 관련된 분야의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항만관리사업소장은

- ① 행정안전부(당시 안정행정부)의 2013. 11. 23. 「지자체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마련 권고」 통보를 반영하여 관공선의 운항계획, 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에 대해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선” 처분하고, (개선)
- ②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지원규칙」에 따라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관공선 의무검사비를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재정손실을 초래한 ○○○○○○○○ 실무담당자 지방○○○○○○○ ○○○(현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오니, (훈계)
- ③ 의무검사비 신청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6건 1,903,500원의 의무검사비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조속히 지원 신청하여 세입조치 하도록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하자검사 미이행 및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소 관 기 관 항만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항만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를 위해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징구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 6. 18. 감사일 현재 기준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유효한 공사현황은 [표 1]과 같이 2017년 이전 5건, 2018년 8건, 2019년 9건, 2020년 5건 총 27건이다.

**[표1]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 현황**

(2021. 6. 18 기준)

연도별	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공사 건수	27건	5건	8건	9건	5건

### 2. 하자검사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라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는 하자보수 관리부 및 하자검사조서 작성하는 등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2017. 7. 1.부터 2021. 6. 18.까지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유효한 공사 27건에 이번 감사에서 하자검사 실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표 2]와 같이 정기검사 60건, 최종검사는 12건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종검사 없이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를 요청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지난 2017. 6월 도 종합감사에서 하자검사 미이행으로 지적되어 재발 방지 ‘주의’ 촉구한 바 있음에도, 이번 감사 시까지 동일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표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유효한 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합 계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계	실시	미실시	계	실시	미실시	계	실시	미실시	계	실시	미실시
계	92	20	<b>72</b>	25	20	<b>5</b>	24	-	<b>24</b>	23	-	<b>43</b>
정기검사	80	20	<b>60</b>	20	20	-	20	-	<b>20</b>	40	-	<b>40</b>
최종검사	12	-	<b>12</b>	5	-	<b>5</b>	4	-	<b>4</b>	3	-	<b>3</b>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공사별 하자검사 실시 세부현황 별첨(별표 1)

### 3. 하자보수보증금 징구업무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르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공사 및 구조물 등 해체하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계약금액이 3천만이 이상인 공사 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을 징구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2018. 10. 24. 계약금액인 33,543천 원인 경남 ○○○○○○ 3개소 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3]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지급이행각서만 징구하고 2018. 12. 14. 공사 준공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표 3]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단위 : 건/천 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사 준공일	비고
경남 ○○○○○○ ○ 3개소 보수공사	'18.10.24	33,543	'18.12.14~'19.12. 14	'18.12.14	지급각서 제출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 미숙 및 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해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보수보증금 징구를 소홀히 하였으나,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항만관리사업소장은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등을 위반하여 2020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 실무담당자 지방○○○○○○○○○○(현 ○○○○○○○○), 지방○○○○○○○○○○(현 ○○○○○○), 지방○○○○○○○○○○(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오니 (주의)
- ② 앞으로 하자보수 보증증권 징구와 하자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오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항만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항만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통영, 거제, 사천지역 항계 내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해 [표]와 같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을 2018. 5. 17.에서 12. 31.까지 계약금액 27,885천 원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행하였다.

[표] 2018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용역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약금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2018년 ○○, ○○, ○○지역 항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용역	'18.5.17. ~ '18.12.31.	폐기물 처리 93톤	27,885	○○○○○	1인 견적 수의계약 ('18.5.16.)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견적 수의 계약 안내 공고 시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의 지역제한은 공사현장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제한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시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 2인 견적 수의계약 공고 시 견적서 제출 참가지역을 경상남도 도내 소재 업체로 제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가격 협상을 통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2018년 ○○, ○○, ○○지역 항계 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2018. 3. 13. 소액수의 안내 공고 시 입찰 참가자격을 ○○, ○○, ○○ 소재 업체로 제한하였고 개찰 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었으나, 무응찰 사유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참가자격의 지역제한 변경 없이 동일하게 2018. 3. 19. 재공고하여 재차 무응찰로 유찰되게 하였으며, 과도한 지역제한으로 선의의 타업체에게 참가기회도 박탈하였다.

또한 가격협상 없이 기초금액 27,885천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통영시 소재 업체인 ○○○○○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절감의 노력<sup>6)</sup>도 하지 않았다.

---

6) 2인 견적 소액수의 안내 공고를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였다면 기초금액 낙찰하한율 88% 적용했을 시 약 24,540천 원으로 계약 체결되었을 것으로 최대 3,345천 원의 예산을 절감 예상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단가 산정시 운반 거리를 50km로 설정하여 부득이하게 항만과 가까운 지역으로만 입찰참가지역으로 정하였고, 이에 도내 전 지역으로 참가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설계 기초가격으로는 해양폐기물처리를 담당할 업체가 1개 업체가 유일하다는 주장과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2019년 해양폐기물처리용역은 본청 ○○○에 계약의뢰하여 체결하였는데 도내 업체로 제한에도 유사한 가격으로 타업체가 낙찰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항만관리사업소장은

-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참여업체 과도한 지역제한으로 소액 수의계약 공고하는 등 부적절하게 수의계약 업무를 처리한 ○○○○○○○ 실무책임자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오니, (**훈계**)
-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오니 수의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환경교육원

조 치 기 관 환경교육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경상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 1]과 같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사업을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사회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지원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지원 단체	예산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 계			207,891	69,800	109,800	28,491	207,121	69,742	109,741	27,838
2018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8개 단체	31,531		20,000	11,531	30,877		20,000	10,877
2019	소 계		99,385	35,000	55,000	9,585	99,269	34,942	54,941	9,586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일반분야)	4개 단체	22,070		20,000	2,270	22,071		20,000	2,271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학교연계분야)	14개 단체	77,315	35,000	35,000	7,315	77,198	34,942	34,941	7,315
2020	소 계		76,975	34,800	34,800	7,375	76,975	34,800	34,800	7,375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10개 단체	55,025	25,000	25,000	5,025	55,025	25,000	25,000	5,025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4개 단체	21,950	9,800	9,800	2,350	21,950	9,800	9,800	2,350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2.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도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소관부서에서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격의 적정성,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대외 공고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1) 공고 접수기간 이후 신청단체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그런데도 ○○○○○에서는 2020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하면서 접수기간은 2020. 1. 15.부터 2020. 2. 5.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다고 공고하였음에도, 사단법인 ○○○○○가 접수기한이 지난 2020. 2. 10. ○○○○○ 문서등록대장에 접수되어 지원제외 대상인데도 사업계획서를 정상 접수 처리하여 부적정하게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5,000천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를 선정함으로써 [표 2]와 같이 정상적으로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한 ‘○○○○○○’가 후순위로 탈락하게 되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2020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사업 후순위 탈락단체**

신청단체명	신청일자	탈락사유	비고
○○○○○○	2020.1.28.	후순위 탈락(11위)	총 10개 단체 지원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2) 동일(유사)사업에 중복 보조금 지원 부적정

○○○○○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을 공고하면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실과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등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표 3]과 같이 관련 실과에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예정 현황을 공문 발송하여 경상남도 ○○○○○로부터 동일 신청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접수내역을 회신 받았다.

**[표 3] 2018~2019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중복지원 회신 현황**

연도별	중복지원 확인 요청일	회신일 (○○○○과)	보조사업자 선정일	중복신청 보조사업자
2018	2018.3.29.	2018.4.3.	2018.5.8.	10개 단체
2019	2019.4.23.	2019.4.24.	2019.5.15.	7개 단체
2020	2020.2.18.	2020.2.20.	2020.3.25.	15개 단체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에서는 ○○○○○로부터 보조사업 동일(유사) 지원여부에 대한 회신을 [표 4]와 같이 받았음에도, 보조사업 신청자 ‘○○○○○○’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세부내용 등이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과 유사 중복됨을 면밀

하게 확인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검토 조서에 ‘타기관·단체 유사보조금 기금 등의 이중지원 여부’ 항목에 ‘없음’으로 제출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건의 동일(유사) 사업이 공고와 달리 이중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유사·중복 사업 이중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담당부서	신청사업명	주요내용	보조사업자	선정일자	지원금액
2018	○○ ○○○			○○○ ○○	2018.01.09.	4,000
	○○ ○○○				2018.05.08.	<b>2,500</b>
2019	○○ ○○○			○○○ ○○	2019.4.1.	3,000
	○○ ○○○				2019.5.15.	<b>5,000</b>
2020	○○ ○○○			○○○ ○○	2020.3.24.	2,710
	○○ ○○○				2020.3.24.	<b>5,000</b>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3. 자부담 미확보 보조사업 교부결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전에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 구비여부, 전용통장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을 확인을 거쳐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여부,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개발 운영사업 보조금을 40개 단체에 지원하면서 5개 단체를 제외한 ○○○○○○ 등 35개 단체(87.5%)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을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표 5]와 같이 총 117,100천 원을 자부담 예치 확인 및 입금이행 조치 없이 교부 하였다.

**[표 5] 자부담 예치 확인 없이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지원단체 수	자부담 미확보 단체	교부금액
계	40개 단체	35개 단체	117,100
2018	8개 단체	7개 단체	17,500
2019	18개 단체	17개 단체	45,000
2020	14개 단체	11개 단체	54,600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4.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제28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도지사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부담 예산은 자부담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보조사업 정산 시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보조금이 당초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조사·검토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반환토록 하는 등 정산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보조금 시정조치 없이 정산처리 부적정

그런데도 ○○○○○에서는 2019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학교연계 분야)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가 [표 6]과 같이 당초사업계획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일용임금 250천 원을 재료비 항목에서 변경승인 없이 집행하였음에도 정산 시 이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 6] 변경 승인 없이 지출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비목	승인된 집행계획	집행금액	증감액	비고
합	계	5,640	5,640	-	
○○○○○ ○○○○ ○○	홍보비	110	110	-	
	강사비	1480	1,480	-	
	인쇄비	440	440	-	
	재료비	1440	1,190	△250	
	위탁사업비	1530	1,530		
	회의비	640	640		
	일용임금	-	250	250	임의지출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2) 지출증빙서류 미 구비에도 보완 등 시정 조치없이 정산처리 부적정

○○○○○에서는 2019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학교연계분야)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에서 강사료 10건 3,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강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고,

2020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가 현장조사 인건비 24건 4,600천 원을 지출하고 이 중 14건 3,000천 원은 지출에 대한 증빙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보완 등 시정 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 3) 자부담 과소집행 반납 조치 없이 정산처리 부적정

○○○○○에서는 2018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금은 전액 집행하고도 자부담은[표 7]과 같이 당초 교부 신청액의 93%만 부담하여 자부담 미 이행에 따른 정산 반납액 142천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반납 등 시정 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 7] 자부담 과소집행에 따른 반납대상액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승인된 사업계획서 집행계획			집행액			반납 대상액
		계	도비	자부담	계	도비	자부담	
2019	○○○○○○○○ ○○○	12,000	2,500 (21%)	9,500 (79%)	11,316	2,500 (22%)	8,816 (78%)	142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실무담당자의 퇴사 등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관련 규정 이해 및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발생하게 된 사항으로 향후 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환경교육원장은

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등을 위반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실무담당자 지방○○○○○ ○○○, 실무책임자 지방○○○○○ ○○○,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2018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 당초계획과 달리 자부담을 과소 집행하여 부담하지 않은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 시 추가 부담하여야 할 142천 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